의안 번호	73

초저출생 시대,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

(남재욱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초저출생 시대,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

(남재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의 원 : 남재욱・곽은정・권순재・김동엽・남호준 류성국・박영주・백승규・서명일・심임숙 이정희・황점복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최우선 과제인데, 이를 뒷받침할 0~2세 영아기 보육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 시급한 상황임

❍ 현재 어린이집 수요는 영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기존 어린이집은 대부분 유아 중심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현장의 영아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 시설 구조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 지역 내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아반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공간 개편에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영아반 대기 수요가 높은 지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영아반 확충 지원사업」의 신설과 즉각적인 예산 편성 촉구

❍ 공공성 확보 장치를 전제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 시설 개보수비 지원 확대와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 체계 마련 촉구

❍ 어린이집의 공간 전환과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의 정비 요구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대통령(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실(의전비서관), 교육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초저출생 시대,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은 2025년 합계출산율 0.799명을 기록하며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그에 따른 인구 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부모들이 체감하는 절실한 문제는 결국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인프라다.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 육아 지원 정책별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가 가장 최우선으로 확인되었고 영아기 보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우 주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보육 현장은 영아 보육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은 평균 7.2개월에 이르며, 대기경험률은 0세 52.5%, 1세 53%로 영아기에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아(0~2세)의 99.4%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 영아 보육 수요가 어린이집에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실제로 2026년 6월 기준 창원시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2,901명 중 0~2세 영아는 9,662명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하고 있어,

창원시 어린이집이 영아 보육 비중이 높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생아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영아 보육 인프라 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린이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기존의 유아 중심 구조의 일부 어린이집은 오히려 원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집이 영아 중심 수요에 맞게 영아반을 확충하고자 해도, 보육실 면적, 층 배치, 바닥난방, 위생·안전설비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맞게 공간 재구성, 설비 보강,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 함에 물리적·재정적 부담이 크다.

정부가 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리모델링 사업 등의 국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와 선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다수 어린이집의 실질적 수요를 맞추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현장의 어린이집은 재정적 여유가 생길 경우 가장 먼저 지출할 항목 1순위로 '시설 개보수비(56.5%)'를 꼽고 있으며, 운영 시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인건비 다음으로 '시설환경개선비(40.4%)'를 지목했다.

또한, 정부의 개보수비 지원이 부족한 탓에 공사를 진행한 어린이집의 51.9%가 운영비를 쪼개어 비용(공사비 평균 1,236만 원)을 충당했고, 21.6%는 개인 융자 등 빚(평균 1,742만 원)을 내어 자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수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자체 부담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역시 현재의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수준이 시설 개보수 수요에 충분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저출생 시대에 변화하는 수요를 맞추지 못한 어린이집은 결국 폐원의 길로 내몰린다. 어린이집의 폐원은 단순히 개별 사업장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보육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가중하고 저출생을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보육은 더 이상 민간의 자율적인 사업 영역에만 맡겨둘 수 없는,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공공 영역이다. 정부가 '운영 지원'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만 머물러 정작 아이들을 안전하게 품을 '물리적 그릇'을 만드는 '시설 지원'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창원시의회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영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국가 차원의 결단과 즉각적인 지원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영아반 대기 수요가 높은 지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공간 재구성, 바닥난방·위생설비·안전설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영아반 확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적극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일정 기간 운영 유지, 목적 외 사용 방지, 조기 폐원 시 지원금 환수 등의 공공성 확보 장치와 함께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 영아 보육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며,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영아 중심의 보육 수요 변화에 맞추어 어린이집의 공간 전환과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지역별 보육 수요에 기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2026년 10월 1일

창 원 시 의 회